사진 부착된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 대선·재보선 투표 어떻게

보선 지역은 별도 투표 용지에 한번 더 기표
부재자 신청후 투표 못한 유권자도 투표 가능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결전이 날이 밝았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만 남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이번 대선과 관련해 전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80%에 달했다. 이는 17대 대선 응답률 67%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는 투표관리관이 전국의 각 투표소에서 투표 개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다. 이번 대선에선 광주 동구청장·동구의원(나 선거구)·여수시의원(바·자 선거구)·화순군의원(가 선거구) 등 5곳의 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투표절차는 간단하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지참하고 투표소로 가면 된다.

미리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투표 장소에 가면 보다 신속하게 투표를 마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번 대선에서는 전국 1만3542곳의 투표 장소 중 지난 4·11 총선과 비교해 547곳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미리 자신이 속한 지역의 투표장소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투표장소를 찾는 방법은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메뉴에서 가능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자신이 가져온 신분증으로 신분확인절차를 받으면 된다. 이후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백색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소중한 한 표 행사가 끝난다.

다만,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후보(기호 3번)의 사퇴로 이번 대선 후보자는 6명이 된 만큼 투표용지에 인쇄돼 있는 이 전 후보의 란에 기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

광주·여수·화순 등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선 별도로 주어지는 또 한 장의 투표용지에 한 번 더 기표를 해야 한다. 동구청장 투표용지는 하늘색, 나머지 동구의원·여수시의원·화순군의원 용지는 연미색이다.

시각 또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투표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선거콜센터 1390)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중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도 이날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구 발전 한목소리 지지 호소

광주 동구청장 후보들 마지막 유세

제18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새누리당 최정원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줄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후보에게도 표를 줘 20% 대의 득표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최 후보는 "열악한 환경 속에 늦게 선거운동을 시작해 불리한 점이 많았지만, 지역의 정서와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구청장 후보"라며 "힘 있는 여권 후보로서 동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역시 어떤 후보보다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선거일을 하루 앞둔 17일 '투표참여 호소문'을 내고 막판 지지를 당부했다. 노 후보는 호소문을 통해 "19일은 오직 동구 부활, 주민복지, 문화전당 동구의 출발"이라며 "행복한 동구를 위해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노 후보는 "아시아 문화수도를 꿈꾸는 동구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민심 화합"이라며 "이를 위해 끝까지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책 선거를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양혜령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권은 주민보다 투표하는 주민들로부터 나오므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양 후보는 또 "동구가 전임 구청장의 중도사퇴에 연이어 거액의 공금비리 혐의까지 터져 행정이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놓였다"며 "새롭게 변화하는 동구가 힘차게 출항하도록 관내 기업, 민간과 공공기관에서도 종사자들이 투표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투표지분류기 분류후 두차례 수작업 확인

■ 개표 어떻게

개표는 두 차례의 수작업 확인을 거친다.

19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투표함이 전국 252곳의 개표소에 도착하면 접수단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

개표 과정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를 한 뒤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뒤 계수기로 집계하고 위원 검열석에서 다시 수작업 확인 등으로 진행된다.

선관위는 분당 260~300매 분류 가능한 투표지분류기를 1700대 운영할 계획이다. 참관인은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정확하게 분류했는지 이를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지를 참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투표지분류기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석을 거치며 확인된 개표 결과는 각 개표소별 위원장이 공표한다. 위원장이 공표한 결과는 개표소에 게시하고 참관인과 언론사 취재진에게도 제공, 개표소 결과와 선관위 홈페이지 결과가 서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산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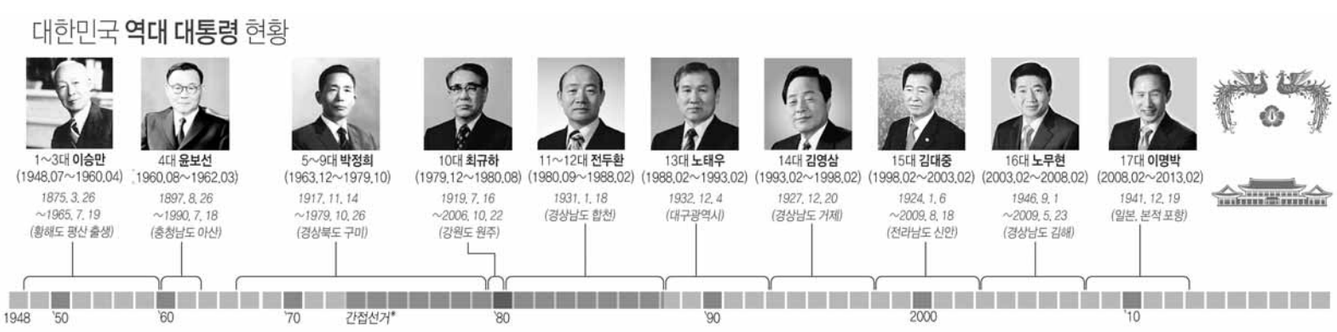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도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전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고 밝혔다.

투표관리인력은 투표관리관 1만3542명과 투표사무원 9만2185명, 투표 안내 도우미 5만3886명 등 총 15만9613명에 달한다.

투표함은 재질을 종이에서 강화 플라스틱으로 견고하게 바꾸었고, 구조를 개선해 잠금장치도 3곳에 하도록 기밀성을 강화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투표는 투표함을 열어 안팎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잠금장치를 한 뒤 시작되며, 종료 뒤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하게 된다. 투표함은 투표관리관에 의해 개표소까지 옮겨지며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과 경찰이 동행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투표율 4대 97% 최고, 17대 63% 최저

■ 역대 대통령 선거 기록들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산술적으로는 19번째 대선이다. 1960년 직선으로 치러진 3·15 대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4·19 혁명으로 이 선거가 무효처리됐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에서 직선은 이번 18대를 포함해 2대~7대, 13~16대 등 모두 12차례이고 간선은 7차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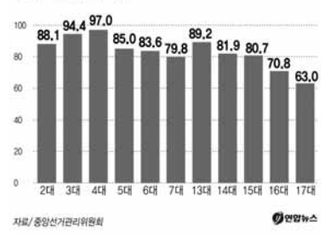
직선제 대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는 4대(60년3월15일)로 97%의 투표율을 보였다. 6·25 전쟁 이후 처음 실시된 3대(56년5월15일)는 94.4%,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3대(87년12월16일)가 89.2%로 뒤를 잇는다.

16대 대선에서 투표율이 70.8%로 뚝 떨어진 데 이어 지난 17대 대선은 투표율이 63%로 역대 최저였다.

4대 직선은 투표율 외에 사상 최고 득표율과 최저 경쟁률 기록도 갖고 있다. 이승만 후보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병사하는 바람에 이 후보가 단독출마해 유효투표의 100%(유권자 총수의 86%)를 얻었기 때문이다.

4대 직선이 무효화된 점을 감안하면 역대 득표율은 2대 이승만 대통령이 얻은 74.6%가 가장 높고 13대 노태우 대통령이 얻은 36.6%가 가장 낮다.

역대 선거에서 당선자와 차점자 후보 간의 득표 비율은 17대 때 가장 많이 벌어졌다. 이명박 당선자가 48.7%,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26.1%를 얻어 22.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역대 대선은 17대 때로 12명의 후보가 출마해 2명이 사퇴, 10명이 경쟁을 벌였다. 14, 15대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경쟁에 나섰다.

/연합뉴스

선거일 선거운동 못한다

선관위, 투표 독려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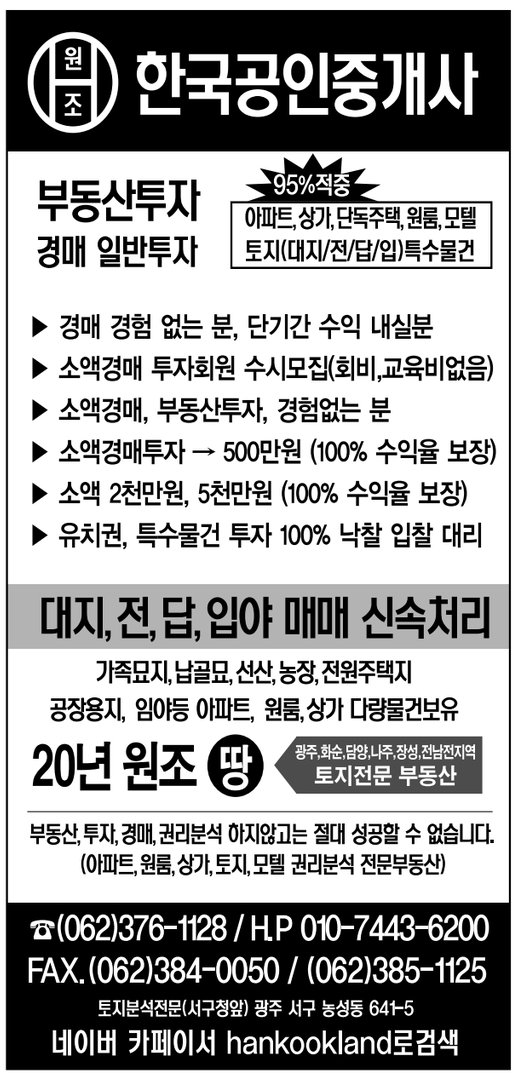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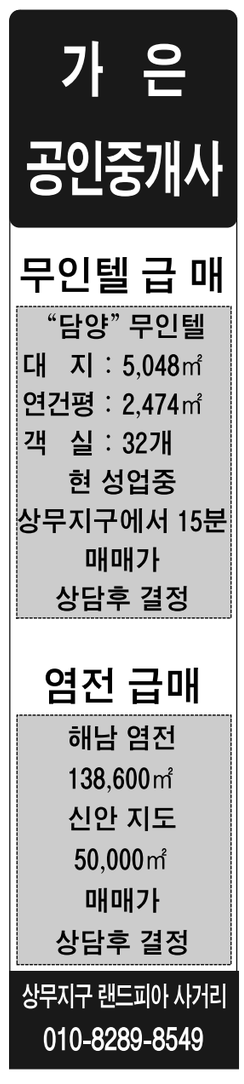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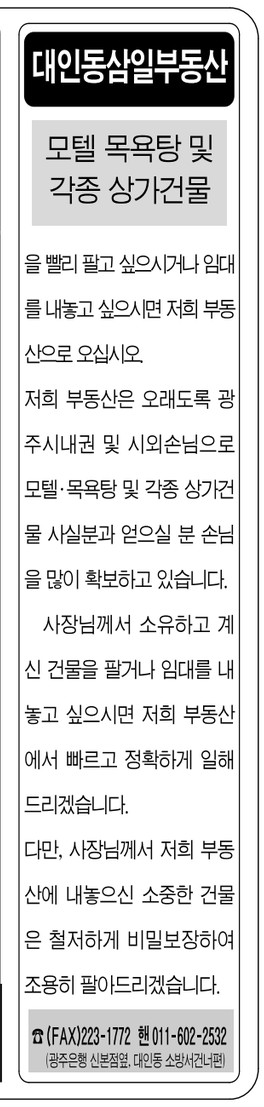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인 19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소 주변을 비롯해 거리 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 ▲선거운동용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한 채 지지 호소·인사 행위 ▲투표소 등에서 후보자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개인·단체 명의로 현수막·피켓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정당·후보자 경비로 투표참여 권유 피켓을 선거사무관계자가 활용하는 행위 ▲단순 투표참여 권유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사기업이 영업활동 일환으로 투표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은 허용된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거나,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활용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정당·후보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사진, 누구를 찍었는지 등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와 연계하거나 특정 연령층·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자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